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9년 9월

“농업부문 녹색성장, 녹색기술 활용과 신제품 육성이 관건”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녹색성장 전략’ 국제심포지엄 개최



충남대 대덕홀에서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녹색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9월 10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은 9월 10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녹색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오세익 원장은 “심포지엄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와 녹색성장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남도 김동완 행정부지사와 충남대 송용호 총장이 축사를 했다.

첫 주제발표자인 미국 예일대학교 로버트 멘델존 교수는 ‘기후변화와 농업: 영향과 적응’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2%에 불과하다.”고 밝힌 뒤 “농업은 비료사용 감소, 저경운 농업, 가축사육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OECD 무역·농업국 윌프리드 레그 농업정책·환경분과장은 ‘기후변화와 농업:

영향, 적응 그리고 완화’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은 온실가스 감소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두가지 정책을 통합하고 다른 정책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연구원 김창길 연구위원은 ‘한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기후가 변화하면 기온, 강수량, 일사량 등 농업기후자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농업지대 재편, 병해충 관리 및 재배 기술 보급, 저탄소 녹색기술의 활용 및 신제품 육성, 위험관리 시스템 활성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하야시 키요타다 농업·식품산업융합연구기구 팀장은 ‘일본 농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 전략’이란 발표를 통해 “전방과정에서는 토양 및 농기계사용으로부터의 직접 배출 저감, 후방과정에서는 농기계, 비료 및 농약 생산, 폐기물 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촌의 녹색성장’이란 발표를 통해 “농업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신제품, 대체작목, 저투입 농법 등 온난화 대응연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충남대 권용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장 사회로 열려, 충남대 김은순 교수, 대전일보 김재근 국장,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정현 사무처장, 우리 연구원 박현태 농식품정책연구본부장,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기획조정연구실장, 충남도청 이성호 농림수산국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그린코리아 2009 녹색성장 국제학술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국제연합은 9월 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그린코리아 2009 녹색성장 국제학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연구원과 10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연구원은 제7세션인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부분을 진행했다.

오세익 원장 사회로 진행된 학술회에서 예일대학교 멘델존 교수는 ‘기후변화, 녹색성장, 그리고 농업’이란 제목으로, 우리 연구원 김창길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 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어 OECD 무역·농업국 윌프리드 레그 농업정책·환경분과장, 일본 농업·식품산업융합연구기구 하야시 키요타다 팀장, 서울대학교 박은우 교수, 농림수산식품부 최형규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지정토론을 했다.

2009년 기본연구과제 결과세미나 개최



연구원은 9월 23일부터 금년도에 수행하고 있는 22개 기본연구과제에 대한 결과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9월 23일부터 금년도에 수행하고 있는 22개 기본연구과제에 대한 결과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20여 일을 앞당겨 결과세미나를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의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과제를 설정하여 2월부터 설계세미나를 갖고 연구에 들어가 5월에 부서별로 연구중간검토를 하고, 이번에 결과세미나를 갖게 되었다. 올해 수행되고 있는 기본연구 과제명은 다음과 같다.

- △ 농어촌 노인장기보험요양제도 추진실태와 개선 방안
-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개편방향
- △ 임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방안
- △ 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 △ 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 경제활성화 방안(1/2차년)
- △ 농어업 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1/5차년)
- △ 쇠고기 산업의 구조와 발전 방안
- △ 시설원예산업의 재도약 방안
- △ 농업부문 FTA 이행 및 보완대책 평가
- △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 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1/3차년)
- △ 북한농업·농촌실태와 대북 농업지원 방향 연구
-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과 대응전략(2/2차년)
- △ 농식품 R&D 전망과 정책과제
- △ 농산물 물류체계 진단과 효율화 방안
- △ 신선편이농산물시장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 △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방안
- △ 농업부문 지방공기업의 발전 방안
- △ 지방자치단체의 농림투융자 국고보조금 운용 효율화 방안
- △ 지역농업 경영주체의 확립과 육성방안
- △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편 방안(2/2차년)
- △ 국제 곡물시장 분석과 수입방식 개편 방안
- △ 식품산업부문 수급모형 개발

KREI i-zine 개편

연구원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연구원 고객 3만여 명을 대상으로 KREI i-zine 고객의견조사를 실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i-zine 개편을 진행했다. 고객의견조사 결과, 콘텐츠 선호도는 '농업정보'(50.3%), '새로나온 보고서'(34.1%), 'KREI 논단'(5.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반적인 만족도 중 '디자인' 만족도가 56.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개편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콘텐츠 분야에서 매주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헤드라인으로 다루는 '금주의 포커스'를 신설해 수요를 반영하였고, 구독자 선호도에 따라 콘텐츠 배열도 조정하였다. 또한, 벤치마킹을 통해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개편했다.

KREI 고객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우리 연구원은 온·오프라인 고객정보를 하나로 통합 관리해 효과적인 연구성과 확산과 고객관계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KREI 고객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약 2개월에 걸쳐 구축해 기존의 온·오프라인 고객 DB를 하나로 묶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7만여 건의 고객정보를 재정비해 업데이트하여 고객관리의 효율화와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이 시스템으로 조건검색 등을 통한 연구원의 모든 고객정보의 추출, 분류, 이력 관리가 용이해져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스템 내에 직접관리 고객(1만 2천여 명)과 예비 활용고객(3만 6천여 명)을 분류하여 차별화된 고객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농업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우리 연구원과 농촌진흥청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동아시아 전통농업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제9회 동아시아 농업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아시아 농업사 국제학술대회는 2001년부터 매년 동아시아의 한·중·일 농업사학회가 돌아가며 개최, 이번 행사는 한국농업사학회와 전북대학교 인문한국 쌀·삶·문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중·일 등 5개국에서 5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 7분과로 나눠 열려 총 40여 편의 논문발표와 토론을 통해 동아시아 전통농업의 사상, 기술, 제도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호주 쌀 산업의 최근 변화' KREI 세미나

연구원은 9월 17일 호주 그린피스대학 권오을 교수를 초청, '호주 쌀 산업의 최근 변화'라는 주제로 KREI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 교수는 "호주는 200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중·단립종 쌀 생산에 있어서 단위당 수확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국내 소비가 적어 생산량 중 약 80%를 수출하는 주요 수출국이었다."라고 말문을 열며, "호주는 최근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국가 농업정책에서 쌀 생산이 배제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며, 2008년에는 38농가가 18,000톤의 쌀을 생산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2009/2010년 국가에서 배분하는 물 공급이 중단되어 향후 호주의 쌀 생산이 증가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호주의 쌀산업 전반에 대해서 발표했다.



풍년 농사에 시름 없도록 해야

김 정 호 선임연구위원

올 가을걷이 농사는 대체로 풍년이 될 것 같다. 날씨가 반농사라고 6월 하순부터 비가 많이 내려주고 8월 초부터 햇볕이 짹짹하게 내리쬐는데다 9월에는 불청객 태풍도 오지 않아 그 어느 해보다 날씨 덕을 많이 보았다. 별이 좋은 초가을 날씨는 우리나라 전체로 따져서 하루에 벼를 대략 1만 톤이나 더 생산하게 한다고 하니 자연의 힘에 감사할 뿐이다.

그런데 풍작에 돈까지 잘 벌여주는 것만은 아닌 것이 요즘은 농사이다. 영농비는 같이 드는데 대풍일수록 농산물 값이 받쳐주지 않아 수익성이 하락하여 풍년에 배꼽는다는 '풍년기근'이라는 용어가 아직 건재하다.

쌀, 과일, 채소 대부분이 풍작 예상

금년 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2% 감소한 92만 4천ha로 확정되었는데, 이 면적에 평년작을 가정하더라도 총 465만톤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식량용으로 약 370만톤을 소비하므로, 소비량의 두 달 반 분량이 재고로 남을 전망이다. 소비자는 양질의 쌀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겠지만, 농업인들은 재고 누적으로 쌀값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많다.

대표 과일인 사과와 배도 풍작으로 보인다. 사과는 성목면적이 늘고 착과량이 많아 생산량은 작년보다 7% 증가한 50만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배는 성목면적이 작년보다 8% 감소했지만 단수가 늘어 생산량은 평년보다 4% 적은 44만톤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올 해는 추석이 전년보다 보름 정도 늦어짐에 따라 조생종 사과와 배 출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당도가 높고 상품성 좋은 과일 가격이 평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김치 재료인 채소도 대체로 평년보다 좋은 작황이 예상된다. 추석 시기의 수급 상황을 보면, 배추는 9월 상순에 저온과

일교차로 고랭지배추의 생육이 부진하였으나, 중·하순 이후 회복되면서 출하량이 늘어나 가격은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무도 작황이 좋고 출하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추석시기 가격은 평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양념채소인 마늘과 양파는 저장량이 많아 가격 약세가 예상되나, 건고추와 대파는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가격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장 채소류는 예측하기에 조금 이른데, 현재까지의 재배의향 면적은 평년보다 다소 많은 수준이며, 중산간 지역에서 가을 가뭄으로 작황이 다소 부진하지만 가격은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상승으로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감소하는 것도 채소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풍년기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올해도 주요 농산물의 풍작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만, 작년보다는 덜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작년 가을에 산지 폐기를 경험한 배, 배추, 대파 등은 어느 정도 생산이 조절된 상태이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과 시장개방으로 인한 공급 과잉의 우려는 늘 상존하고 있다. 품목별 주산지마다 대체작물을 찾기 어려워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경쟁적인 조기출하의 출혈경쟁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도 따라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농산물은 대부분 생활필수품으로 소비량이 대체로 일정하기 때문에 공급량 변동이 곧바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저장이 어려운 신선채소는 가격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다. 가격 등락이 심하면 농업경영자는 투기적 생산에 치우치기 쉬우며, 주부들도 계획적인 가계소비가 불가

능하여 소비를 줄이게 되므로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농산물의 수요에 맞추어 적절한 공급 조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출하량을 조절하는 것과 중기적으로 생산 규모를 조절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농업인들은 품목별 조직을 결성하여 공동브랜드와 공동출하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높여나가고, 농협의 계약재배나 출하약정사업에 참여하여 출하량을 조절하도록 하며, 관습적으로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예견하면서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규모와 출하량을 조절하는 합리적인 농업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농업관측 강화와 조기에보시스템 필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와 농협의 역할도 중요하다. 먼저, 정부는 농업인들의 적정 생산과 합리적인 출하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관측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 급락시에 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과 소득의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출하 조절이나 유통명령제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매·비축사업, 농협의 계약재배사업 등도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계약재배는 전체 물량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 품목과 물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연구원은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서 매일 품목별로 수급 동향과 가격 예측을 발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생산 조절을 위한 중기선행관측과 소비의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업관측 정보가 농업인에 널리 활용되어 풍년에도 가격 걱정없게 되기를 기대한다. **R**



축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의 효과

허 덕 연구위원

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둔갑)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필자가 10년 전 쇠고기의 원산지 부정유통 비율을 추정해 본 적이 있었다. 당시 수입 쇠고기의 약 47%가 둔갑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원산지 표시제 부정유통 방지가 핵심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려는 이유는 비단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업자가 부당 이익을 취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속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데 그쳤지만, 광우병 파동을 거치면서 이제는 원산지 둔갑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진전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가 바로 원산지 표시제도이다. 그 중에서도 부정유통의 근원이었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는 이 제도의 핵심이다.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육류에 대해서 생산부터 소매까지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쇠고기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생고기를 구입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부정유통의 소지도 많다. 따라서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농축산물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1996년에 보건복지부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실시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도입을 시도했지만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소비자 선택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이유로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제도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05년 12월에 가서야 겨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당시에 적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그나마 2007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이끌어 낸 것만도 다행이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다가 결국 작년 광우병 파동을 기점으로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함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적용을 서두르게 되었다. 우선 2008년 6월 22일부터 쇠고기에 도입 하되 계도 기간을 두고 10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에는 12월 22일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원산지표시 효과 다양하게 나타나

정부가 축산물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감소하고 심지어 주요 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매장을 철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안전성과 저렴성을 무기로 하는 정육점형 식당과 한우프라자 등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큰 의미에서 축산물 원산지표시제 도입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양돈부문에서는 제도가 적용되는 2008년 12월 월설 이전부터 돼지와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가격 상승의 주요인은 쇠고기와 같이 취급하는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위해 쇠고기와 동시에 돼지고기도 원료 구입비율을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닭고기부문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2008년 4월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정에서 닭 850만 마리를 수매하여 비축하였는데, 이 비축물량 처리가 문제였다. 원래 계획은 2년에 걸쳐 비축물량을 소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원산지표시제 도입시기가 가까워지

면서 그 많던 비축물량이 한 순간에 판매되었다. 냉동 비축한 닭고기도 국내산이 있기 때문이다.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효과 높아

연구진에서는 3,000가구의 소비자 패널 데이터와 전국의 530개 음식점과 870가구의 소비자를 조사하여 얻은 결과를 통해, 쇠고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도 도입의 효과를 예측해 보았다. 조사 결과, 제도 시행 이후 한우소비 비율이 60.1%에서 63.3%로 3.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60%의 업소가 한우고기 사용 비율을 늘렸는데, 제도 시행 이전에는 한우고기 사용비율이 46.1%였던 것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는 75.0%로 28.9%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큰 물량으로 환산하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소 산지가격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추정한 결과, 18% 정도의 가격 상승효과로 나타났다. 즉,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의한 효과는 시행 초기 19.9억 원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올해 8월에 84.6억 원으로 한우 수요 증가 효과를 가져왔고, 적어도 연간 301억 원 정도의 한우 수요 증가 효과가 있는 셈이다. 넓게 보아 정육점형 식당 확산이라는 효과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의 효과로 본다면, 173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수요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모니터링 비용도 크고, 쇠고기 이외에 다른 축산물의 경우 아직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원산지표시제도와 축산물이력추적제도를 조화롭게 운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FTA 협상 동향

최 세 균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는 2009년에도 적극적으로 FTA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협상 중인 국가는 페루, 호주, 뉴질랜드, 걸프협력회의(GCC: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등 6개국),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에 달한다. 협상을 추진 중인 국가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4개국), 터키, 콜롬비아, 중국, 러시아 등이다.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인접국가와의 FTA도 추진되고 있다.

서명 기다리는 한·EU FTA

유럽연합(EU)과의 FTA협상은 2007년 5월부터 시작되어 2년여의 협상 끝에 지난 7월 타결되었다. 양측은 10월 중에 서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EU와의 FTA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업 부문에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는 미국과의 FTA에 비해 훨씬 작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EU FTA도 미국과의 FTA와 같이 축산업(특히 돼지고기와 낙농품)에 주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와 생산자 모두 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한·EU FTA 서명이 이루어지는 대로 정부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축산물 수출국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가 미국, 캐나다, EU 등과의 FTA 협상을 친척시켜 나갈수록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국들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와의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정부간 공식 협상은 2009년 5월에 시작되어 9월까지 2차 협상이 끝난 상태이

다. 호주, 뉴질랜드의 관심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 조건을 미국이나 EU와 유사하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맞춰질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확대되는 축산업 분야의 개방을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다. 협상은 빠르면 2010년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쟁점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호주, 뉴질랜드, 페루와의 협상 진전

우리나라는 남미의 풍부한 자원개발에 관심이 높다. 특히 2007~08년의 세계적인 자원부족과 가격폭등을 겪으면서 곡물, 석유, 광물 등의 자원 확보필요성이 커졌다. 우리나라는 페루의 풍부한 자원과 경제성장 잠재력이 가져다 줄 양국 간의 이익은 물론 남미공동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페루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은 2009년 3월에 시작되어 7월까지 세 차례 개최되었다. 페루는 우리나라 수산물 및 농산물 시장 개방에 관심이 높으나 우리나라는 수산업 등을 개방이 어려운 민감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진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양국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 빠르면 2010년 상반기까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일 FTA는 오래 전부터 준비가 진행되었고 여섯 차례의 공식 협상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한-일 FTA 관련 연구는 1998년에 민간 공동연구, 2002년에 산관학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은 2003년 12월에 정부간 공식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협상이 진전되면서 시장개방 폭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독도 문제를 비롯한 정치, 외교적인 문제 등이 가미되면서 협상은 장기간 중단 상태에 빠져들

게 되었다.

양국은 2004년 11월 협상 중단 이후 2008~09년 기간에 세 차례에 걸쳐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나 협상 재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일 FTA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일본의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FTA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변화가 예상되는 한·중·일 FTA

협상 재개는 우리나라의 요구를 일본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거나 양국 간의 교역 현황을 분석해 볼 때 한·일 FTA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인력이동, 비관세장벽 완화,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의 문제에서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기대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매우 소극적인 것은 물론 기타 우리나라의 요구 사항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의 정권 교체로 계기로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기대된다.

한·일 FTA 진전은 중국을 한·중·일 FTA 등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한·중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 단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중 FTA에서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대한 주요 수출국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일 FTA의 적극 추진은 중국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게 할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농민시장을 통한 지역거래 확산

김태곤 연구위원

미국 농업은 대규모 농장제 농업이다.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외로 영세한 농가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 2007년 농업센서스에 의하면 5년 전에 비해 대규모 농장이 늘어나면서 29만 1,329호의 영세농가가 신규진입하고, 21만 5,519호가 은퇴하여, 7만 5,810호가 순증가하였다. 총농장수는 220만 4,792호로 1935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증가로 반전하였다.

영세규모 농가가 증가하는 현상은 지역단위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연대하는 직거래방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농업이 글로벌 추세를 견인하면서도 지역단위에서 직거래를 포함한 지역유통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 추세 속에서 지역유통이 활발하게 전개

지역유통의 대표적인 현상이 농민시장(Farmers Markets)과 공동체지원농업(CSA) 등이다. 2007년도 유기농업과 CSA가 각각 20,437호, 12,549호에 달한다.

CSA는 직거래의 한 형태로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 소비자는 대금을 선불한 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으며 생산리스크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도시 또는 도시근교지역에서 신규 진입농가들이 사회적 공정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소비자와의 연대를 통하여 확산되고 있다.

또 농민시장도 2008년 8월 현재 전국 4,685개소, 참여하는 농가는 13만 6,000호에 달한다. 2007년 농민시장의 판매금액은 12억 1,000만 달러로 호당 평균 8,900달러이다. 이러한 직거래에 참여하는 농가는 도시근교의 입지조건을 살려서 겸업소득으로 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미국에서 농민시장이란 일종의 산지 직판장이다. 상설 점포부터 가설 시장, 그리고 공원 등에서 자동차에 텐트를 설치한 간이 매장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신선 채소와 과일을 비롯하여, 육류, 꽃, 반찬류 등 가공품, 빵, 케이크 등이 주로 팔린다.

미국 농업부(USDA) 통계에 의하면 농민시장은 최초로 통계를 집계한 1994년 1,755개소에서 2008년 4,685개소로 확대되고 있다. USDA는 지역산 농산물 수요를 2002년 40억 달러에서 2012년 7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각종 지원을 확충하고 있다.

농민시장이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배경에는 청과물 식품중독 사건에 의한 소비자의 식품 안전의식의 고조 속에서 지역 농업 유지 의식, 그리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등이 있다. 소비자가 농민시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청과물의 선도와 속도, 슈퍼에서 사기 어려운 다양한 품목, 생산농가와와의 인간관계 유지, 농업 생산에 관한 정보 입수, 지역경제나 지역농업에 대한 지원,

농산물 수송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절감 등에 관심이 높아진 결과다. 소비자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농민시장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USDA는 농민시장추진계획(Farmers' Markets Promotion Program, FMPP)에 의한 보조, 영세 경영의 농지구입자금 융자, 저소득계층에 대한 식량지원계획 등을 통하여 농민시장 보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FMPP는 농민시장을 비롯하여 CSA, 도로변 직판장, 농가민박 등 농가의 다양한 직거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지원사업은 토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출하농가나 경영주체 연수, 신문이나 TV를 통한 광고, 신규 출하자 확보 및 소비자 이용촉진을 위한 행사 개최, 시장 설계 및 디자인, 수송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연구, 신규 진입 농가 연수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있다. 지원대상도 농협을 비롯하여 출하농가 조직, 지자체, 대학 등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이다. 보조금액은 건당 2,500달러에서 최고 10만 달러에 달하며, 2009년도 예산은 500만 달러이며, 2011년도는 1,000만 달러를 책정해 두었다.

농민시장에 의한 혜택은 참가하는 영세농가의 소득향상이 가장 큰 효과이다. 소비자는 지역산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동시에, 환경이나 자원 보전, 체험과 영양균형 등 농업의 교육적 효과와 같은 메리트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인간관계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도 인정된다.

생산자의 소득향상, 환경보전, 지역활성화 효과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운동(Buy Fresh Buy Local)이 미국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질수록, 정부 지원이 확충될수록 농민시장이나 CSA에 의한 직거래는 확산될 것이다. 지역유통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USDA는 농민시장 리스트와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 직거래는 농민시장과 CSA 이외에도, 도로변의 무인 판매소나 농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사례도 있고, 또 소비자가 채소나 과일 농장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수확한 후 대금을 지불하는 유픽크(U-Pick)도 성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직거래나 지역유통이 글로벌 유통에 대응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면서 안전과 안심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생존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9월 주요 농업 · 농정 동향

세계 5대 유전자원 강국 실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통해 국내·외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할 수 있는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018년까지 '세계 5대 유전자원 강국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가용 유전자원에 대한 사전조사를 강화하고, 전략적 수집체계 구축을 위해 대학, 연구소, 유전자원 책임기관 등이 참여하는 유전자원 조사·수집팀을 구성·운영한다. 한반도가 원산지인 토종자원의 반환 추진을 위해 국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제농업기구 및 소속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유전자원 특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농업유전자원센터를 정밀평가 중심기관으로 운영하며, 관리기관을 유전자원의 병·충·기능성 성분 등에 따른 분야별 정밀평가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량 및 저활력 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학·연 및 유전자원 관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특별증식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래종 유전자원 등 국가 중요자원에 대해서는 DNA뱅크를 구축하여 자원주권 확보 및 생명산업 소재 활용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유전자원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전자원 책임기관에 단기전문가과정을 개설·운영하며, 유전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을 대학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유전자원은 생명산업의 근간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농어업에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자산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국제적으로도 이를 둘러싼 경쟁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유전자원을 생명산업에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동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 공공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공공서비스 제고 방안으로 「농어촌 서비스기준(안)」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연구원이 주관하여 이번 공청회는 농어업인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농어업인단체,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공무원 등이 토론회로 참여하여 농어촌 서비스기준(안)의 항목과 목표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안)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반영, 2010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서비스기준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농어촌 서비스기준(RSS)이란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공 서비스의 항목과 목표 수준으로, 농어촌 주민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기관의 관련 정책 수립 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농식품부는 도농간 형평성과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농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농어촌 주민의 접근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상하수도, 교통 등 주민의 요구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농식품부는 2010년 모두 3곳에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을 벌이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후 남은 발효액은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만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되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공동자원화 시설 150개를 설치하여 돼지분뇨 550만 톤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중 100곳은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해 연간 365만 톤을 바이오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활성화하고 참여업체의 경제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가축분뇨와 음식잔재물 등이 혼합된 액비를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 공정 규격 등을 개정하며, 가축분뇨법에 의한 액비 기준 변경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요건 완화 등을 위해 환경부와의 협의도 진행된다. 또한 국내 가축분뇨 에너지화 전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된다. 2020년까지 선진국 대비 90~100% 수준을 목표로 사용 원료별 최적 바이오가스 생산기술, 시설의 운전 및 관리 기술, 바이오가스 정제 및 농축기술 등의 개발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에 대비함과 동시에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에너지 대체, 가축분뇨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화학비료 대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 미래정책연구실>

충남발전연구원, 한경대와 MOU 체결



우리 연구원 오세익 원장은 9월 10일 한경대와 연구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오세익 원장은 9월 10일 리베라호텔에서 충남발전연구원(CDI) 김용웅 원장과 연구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CDI와 MOU 체결로 양기관은 지방농업 발전에 더욱 내실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오세익 원장은 협약식에서 양 기관의 MOU 체결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했고, 김용웅 원장은 충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미 올해 두 차례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오세익 원장은 한경대학교에서 김성진 총장과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공동이익의 실현을 위해 공동 관심분야의 협동 연구와 국제농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서명해 앞으로 학연간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우리 연구원과 한경대학교는 국제농업·농촌 개발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교류 등 국제농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해 앞으로 국제농업개발 교육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료교환,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도 추진키로 합의해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아프리카 농업 관계자 연수 실시

우리 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위탁을 받아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16일간 카메룬 농업 및 지역 개발부

아그네스우파메잠베를 비롯 아프리카 농업 관련 담당자 등 9개국 12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한국의 농업 변화와 농업협동조합의 역할, 농협의 금융 시스템, 농협의 구매·유통 사업, 한국의 산림조합 등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과 관련된 이론과 현황,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고삼농협 등의 기관도 방문했고, 경북의 청도 와인 터널과 세심마을 등 농촌 현장을 견학했다.

연구진 동정

△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9월 9일 전문 건설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기상청이 개

최한 남북기상협력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9월 2일 농촌 인적자원관리센터에서 농촌진흥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산물 수출유통 관련하여 강의를 했다.

△ 최경환 연구위원은 9월 3일과 4일 금호제주리조트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지자체 담당공무원 연찬회에서 '농작물 재해보험과 타 농가 경영안정정책의 이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 송주호 연구위원은 9월 1일과 2일 제주 대학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농업정책 포럼에서 DDA 협상 관련 발표를 했다.

△ 김태근 연구위원은 9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가 주최한 워크숍에서 '우리밀산업의 발전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김창길 연구위원은 9월 14일 일본 나고야대에서 열린 자원관리세계대회에서 '교토의정서에 대응한 한국의 대응 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 장철수 연구위원은 9월 11일 강원대에서 농업최고경영자과정생을 대상으로 '임산물 이용 및 산촌진흥방향'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 송미령 연구위원은 9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준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경북 영천에서 현장토론회 개최



제5차 KREI 현장토론회를 9월 21일 경북 영천시청에서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9월 21일 경북 영천시청에서 제5차 KREI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오세익 원장, 김병률 미래정책연구실장 등 연구원 관계자와 김영석 영천시장, 김태옥 영천시의회 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영천지역의 귀농·귀촌

인구유입 활성화 방안, 포도산업 발전 방안, 지리적표시제 특산물 등록 등을 주제로 하여 토론했다. 김영석 시장은 영천시의 농업·농촌 발전에 추진력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를 연구원 측에 당부

했고, 오세익 원장은 "영천시의 부단한 노력이 지역농업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며 연구원도 일선 농촌현장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를 마치고 영천지역 포도 재배 및 가공시설 현장을 방문했다.